



전경련 국제동향

5월 2째주

국제본부 국제경제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①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
- ② 국무원 상무회의, <장강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발전 계획> 채택
- ③ 인민일보, 중국 전자 지불서비스 한국 진출 보도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① 일본, 미국정부에 의한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 ② 엔화강세 등으로 인해 日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미진
- ③ 경기둔화 장기화 조짐

3 OECD 주요 정책동향

- ① 제122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결과
- ②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워크숍 결과

4 라트비아 경제동향 보고서 발표

5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 동향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

- 5.10(화)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6.4월부터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을 일반 무역 수입상품으로 간주, 통관신고서 신고서 제출과 수입 허가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등을 실시했으나, 新 정책 실시를 다시 1년간 유예하는 조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 新 정책 실시를 1년간 유예하되 세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1년 유예기간은 통관신고서 제출 준비 작업 기간으로 설정, 유예기간 종료 후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제출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
- ※ ‘16.4.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3.인터넷 해외 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28일부터 시행) 참조
- 상기 보도에 따르면, ‘16.5.5일~7일간 국무원 판공청,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등 다수 관련부처와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실시 한 달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 전자상거래 기업의 애로를 청취
-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화장품, 건강제품 등은 통과신고서 발급까지 식약총국과 질검총국의 검사시일이 오래 걸려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新 정책 유예기간 설정과 새로운 관리 카테고리 개설,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은 통관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무조건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전자상거래 연구실 장모(張茉) 부주임은 新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추진된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나, 해외직구 발전을 통한 국민 소비 진작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바,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新 정책 이행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2 국무원 상무회의, <장강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발전 계획> 채택

- 5.11(수) 국무원 상무회의 <장강(長江)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발전 계획>을 채택, 기존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FTZ'), 자주혁신시범구 등에서 성공을 거둔 개혁 조치를 동 지역에서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외개방 확대, 산업 발전 등 분야 발전 목표를 제시
- (기존 개혁 조치) △정부 기능 전환, 메커니즘 혁신 관련 선행 개혁 조치, △금융, 토지, 재산권 거래 등 시장 통합 조치,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사회보장 사업 등 기존 개혁 조치 적용 예정
- (개방 확대) 외자 유치 및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항구 건설, 무역 원활화 조치 실시
- (산업 발전) 장비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제약, 자동차, 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 및 핵심 분야 혁신 추진과 금융, R&D,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발전 추진
- 상기 발전 계획에 따라, 장강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상하이를 중심으로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허페이(合肥), 장쑤(江蘇),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닝보(寧波) 일대의 연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 고속도로 및 장강 운하 등 종합 교통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
-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발전전략처 가오후이칭(高輝清) 처장은 장강 삼각주 지역은 중국 동, 중,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동시에 동 지역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국 40% 이상에 달하는 바, 지역 연동 발전과 조화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소개

1-3 인민일보, 중국 전자 지불서비스 한국 진출 보도

- 5.13(금) 인민일보는 중국의 즈푸바오(支付寶), 웨이신 즈푸(微信支付) 등 전자 지불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는 등 한중간 협력 강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

- 즈푸바오를 운영하는 마이금융서비스그룹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에서 위안화로 지불할 수 있어 쇼핑 편의가 대폭 제고되었고, 쇼핑 외에도 즈푸바오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업체들이 소비, 관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

- 또한 인민일보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전자 지불 서비스 도입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중국 지불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날로 증가했으며, ‘15년 기준 즈푸바오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 업체가 3만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

- 롯데 면세점은 ‘12년 즈푸바오 지불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12년 매출액 2,475억 원(한화)에서 ‘14년 4,500억 원으로 매출액이 상승.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일본, 미국정부에 의한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1. 미재무부, 환율 감시(관찰)대상국 범주 신설 배경

○ (TPP 반대세력 포섭을 위한 연막) 당지 언론은 미국 재무부가 4.29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보고서(반기별)에서 환율 조작국(직접 무역제재 적용대상)과는 별도로 ‘환율 감시국’을 신설하고 일본 포함 5개국(한국·중국·독일·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TPP 조기비준(의회 내 반대세력 회유)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

- 대선을 앞두고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이 “노골적인 환율조작국(자국 수출품 수요확대를 노린 통화 평가절하 유도)” 등으로 악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TPP 조기승인 가능성 불투명)

- TPP는 오바마정부의 정책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공화당)과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커, 반대세력을 염두에 둔 포섭 작전(환율 조작국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강경기조 강조)을 구사하여 의회 조기비준을 유도하겠다는 의중

- 대다수 국제금융 전문가들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5개국 중 직·간접 무역제재 발동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가 없는 점(시정조치 불필요)으로 유추해 볼 때, “미 의회의 불안감 해소를 노린 조치”로 분석

※ ①對미 무역흑자 연간 200억불 초과, ②경상수지 흑자폭 GDP 대비 3% 이상 유지, ③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외화매수 개입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일본의 경우, 연간 10조엔 규모의 엔화매도 개입에 나설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지난 4년간 외환시장 개입 실적은전무한 상황

○ (엔저 용인에 대한 국내 비난여론 의식) 차기 대선주자(도널드 트럼프 후보)들이 “일본과 중국은 환율조작국”이라고 지목하는 등 엔화 장세에 민감한 국내 여론

상 미국정부도 종전처럼 엔화 약세를 마냥 지켜보기는 어려운 상황

- 일부 국제금융 전문가는 4.15일 공표 예정이던 환율정책보고서를 월말로 늦춘 것은 일본은행(4.28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추가 완화조치 발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지난 G20 회의에서 일본정부(아소 재무대신)가 최근 엔화 장세를 두고 “매우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금번 보고서에는 “질서 정연하다”고 평가하면서 G20·G7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일본이)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금융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촉구
- (일본정부, 환율 감시국 지정 영향 제한적) 아소 재무대신은 4.30일 급격한 엔화 강세장 전개 관련, “일방적으로 편향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필요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재차 예고
- 미국정부가 일본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약할 만한 재료가 될 수 없다”고 명언하면서 미국의 외환개입 자체 경고를 정면으로 반박

2. 금융시장 반응

- (일본, 외환개입 여부 불투명) 시장 전문가들은 금번 보고서를 통해 외환개입 여부를 둘러싼 미·일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하면서도, 일본이 미국의 양해없이 단독개입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행에 나설지는 의문시된다는 견해가 다수
- 아소 재무대신은 엔고 흐름이 부각될 때마다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적인 외환개입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통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우려
- (엔화강세·증시약세 전망 우세)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조치 유보 결정(4.28) 및 미 재무부 보고서 발표(4.29) 이후 주재국 금융시장은 급격한 엔화 절상(달러당

111엔대→106엔대) 및 증시 급락(17,290엔→16,147엔) 흐름을 재현(4.27→5.2 기준)

- 일본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반응은 예견하고 있었으나, 발표 시점이 좋지 않았다” 고 토로(일 추가 완화 유보와 미 외환개입 견제라는 엔고 요인이 동시 작용)
- 일부 시장 전문가는 엔화환율 상승 흐름이 한층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리적 저항선(105엔) 돌파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장세로 분석

2-2 엔화강세 등으로 인해 日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미진

1. 마이너스 금리 도입 약 3개월 경과, 정책 효과는 미진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2.16)으로부터 곧 3개월을 맞이하나, 국내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로 추가하락이 야기되는 등 기대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장기 금리*) 정책의 도입 결정 전일 약 0.2%(1.28) → 약 △0.1%(5.10)로 하락
- (엔/달러 환율) 1달러=118엔(1.28) → 1달러=108엔(5.10)로 엔화가치 대폭 상승
- (닛케이 평균주가) 약 17,000(1.28) → 약 16,500엔(5.10)으로 하락

○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을 통해 기대한 ‘금리 하락 → 엔화약세 → 수출기업 실적 개선 기대 확산 → 주가 상승 → 실물경제 개선 → 물가 상승 압력 발생’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는 금리 면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언급(4.28 정례기자회견)

2. 엔화 약세 저지요인

○ 장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제 감속으로 인한 시장심리 악화,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불투명감, △미국 당국의 엔화약세 견제 등이 엔화 약세 저

지요인이 되고 있음.

- (신흥국 경제의 감속) 중국 등의 경기 감속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가 강해지면서, 캐리트레이드*를 상쇄하는 반대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어 엔화강세 압력 발생

※ 초저금리로 빌린 엔을 매도하여 상대적으로 고금리 통화를 매입

- (미국 경제 부진으로 인한 금리인상 불투명) 신흥국 경제 감속, 달러강세로 인한 수출 타격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부진을 보이면서, 당초의 2016년 중 0.25%씩 4회의 금리인상 전망(2015.12월 FOMC)을 2회로 수정(2016.3월)한 결과, 미일의 금리차가 확대되지 않아 달러강세 진행 미미

※ (美 실질GDP(계절조정치)) 1.4%(2015. 4/4분기) → 0.5%(2016.1/4분기)로 감속

※ (美 2016.4월 고용통계)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비농업부분의 고용자 증가수(전월대비)가 16만명에 불과하여 호조의 기준이 되는 20만명 하회

- (미국 당국의 엔화 약세 견제) 미국 재무부가 4.29 공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일본 등을 환율조작국 ‘감시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달러강세를 제재하려는 자세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엔화 매입 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 확산

○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이 중요하나, 현재 상기의 3가지 엔화 약세 저지 요소가 존재하는 바, 엔화약세·주가상승 실현에 난항이 예상됨.

2-3 경기둔화 장기화 조짐

1. 주요내용

1. (내외수 전반 약화) 일본정부가 발표한 3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용 호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실물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소비) 가계실질소비지출은 서민밀접품목 가격상승, 꽃샘추위에 따른 시즌의류

소비 급감 등으로 2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 ('15.3월 이후 최대 하락 폭). 전월 대비로는 0.5% 증가하였으나 2월 윤달효과(1.7%)에 대한 반동으로 상승폭은 축소

○ (생산) 광공업생산은 4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상승(0.1%)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미약한 수준. 특히, 자동차업계의 생산 축소 계획 등 2월 실적 부진(△5.2%)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로는 3.6% 반짝 증가 시현

○ (수출) 엔저효과 둔화 및 대외수요 정체로 금액(△6.8%)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량 역시 2개월 만에 감소세(△1.0%)로 전환되는 등 여전히 저조한 수준

2. (1/4분기 0% 내외 성장 전망) 주요 민간 전망기관(44개사 평균)이 예측한 1/4분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는 전기대비 0.08%(연율 0.25%) 수준으로 2분기 만에 소폭 플러스 반등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나, 최근 시장불안 및 구마모토 강진 충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위축 장기화 조짐 등으로 2/4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일부 제기

2. 상세내용 : 3월 주요 경제지표 동향

○ (소비동향: 부진세) 가계 소비흐름을 보여주는 실질소비지출(2인 이상)은 전년 동월대비로는 5.3%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0.5% 증가

- 이는 시장 예측치(전년 동월대비 4.2% 감소)보다 낮은 수준이며 식료품 가격인상, 꽃샘추위에 따른 시즌의류 소비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또한,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부진으로 소매판매 역시 2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로 전환되고,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액도 4개월 만에 1.2% 감소

- 일본정부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3월 경기동행지수(2010=100)가 2개월 만에 상승(111.2)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기조 판단에 대해서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11개월 연속)을 유지

○ (생산: 개선세 미약) 자동차업계의 감산계획 반영 등 2월 생산 축소(△ 1.2%)에 따른 반동으로 전월 대비로는 크게 증가(3.6%)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소폭 증가(0.1%)에 그치며 미약한 개선세

- (물가: 마이너스 상승률 전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Δ 0.3%를 기록하며 '15.10월 이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상승률로 전환('13.4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하락폭 시현)
- 서민밀접 품목의 가격인상 압력 등으로 Δ 식료(2.6%), Δ 의류·신발 (2.1%), Δ 교양오락(1.7%) 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약세 영향으로 Δ 광열·수도(Δ 8.5%), Δ 교통·통신(Δ 3.0)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여력을 제한
- (고용: 호조세) 인력부족 심화 등으로 유효구인배율(1.30배)이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실업률(3.2%) 역시 전월 대비 0.1%p 하락하며 2개월 만에 개선
- 다만, 정규직(0.82배) 고용은 억제되고 비정규직(1.79배) 증가 추세가 심화
- 산업별 신규 구인 수는 숙박·음식업(13.8%), 의료·복지(6.4%), 도소매업 (6.2%) 등이 전년 동월대비 지속 증가
- (건설투자: 증가세) 상속세 대책 효과 및 주택자산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3월 중 신설주택착공호수가 전년 동월대비 8.4%, 전월 대비 2.0% 각각 상승하며 증가세 유지
-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3월 중 무역수지(통관)는 수출(6.5조엔)이 수입(5.7조엔)을 초과함에 따라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흑자 시현 ('10.10월 이후 최고 수준)
- 수출(6조 4,568억엔)은 엔저효과 약화, 대외수요 저조로 금액(Δ 6.8%)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량(Δ 1.0%) 역시 2개월 만에 감소
- ※ '16.3월 엔/달러 환율(평균)은 113.1엔으로 전년 동월(119.8엔)대비 5.6%엔 절상
- 수입(5조 7,016억엔)은 유가약세 등으로 금액(Δ 14.9%)이 15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물량(5.2%)은 4개월 만에 증가
- (경기침체 장기화 관측 확산) 일본경제연구센터 조사결과(4.11)에 따르면, 주요 민간 전망기관(44개사 평균)이 예측한 '16.1/4분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는 0.08% (연율 0.25%) 수준으로 전월 조사(연율 0.81%)에서 대폭 하향 조정됨.

- 1/4분기 성장률이 2분기 만에 소폭 플러스로 반등하더라도, 시장 불안 (엔화강세·주가 등락) 및 구마모토 강진 충격으로 가계·기업심리가 한층 더 악화되고 있어 2/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

※4월 소비자태도지수(40.8) 2개월 만에 전원(41.7)대비 하락 전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월	2월	3월
수출 (액)	655,465 (△2.7)	637,476 (△2.7)	697,742 (9.5)	730,930 (4.8)	756,139 (3.4)	53,514 (△12.9)	57,037 (△4.0)	64,568 (△6.8)
(물량)	(△3.8)	(△4.8)	(△1.5)	(0.6)	(△1.0)	(△9.1)	(0.2)	(△1.0)
수입 (액)	681,112 (12.1)	706,886 (3.8)	812,425 (14.9)	859,091 (5.7)	784,055 (△8.7)	59,991 (△17.8)	54,638 (△14.2)	57,026 (△14.9)
(물량)	(2.6)	(2.4)	(0.3)	(0.6)	(△2.8)	(△5.0)	(△2.5)	(5.2)
무역 수지	△25,647 (△139)	△69,411 (171)	△114,684 (65.2)	△128.161 (11.8)	△27,916 (△78.2)	△6,477 (△44.2)	2,399 (△156.3)	7,542 (237.5)

3 OECD 주요 정책동향

□ 정보출처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3-1 제122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결과

1.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라운드 테이블 : 장단기 회사채 시장의 변화와 이슈

가. 논의배경

□ 금융개혁,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및 통합으로 인해 장단기 회사채시장의 거래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RP 등 핵심 자금조달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 유동성 및 기타 위험 관리 등을 위협할 가능성

□ 시장전문가들과 원탁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와 파급효과, 정책적 시사점 검토

나.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파급효과

□ (금융규제 강화)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등 강화로 채권시장 조성자 (market-maker)들의 채권보유 비용이 증가하면서 채권매매 딜러(dealing) 여력과 의향이 감소

○ 그 결과, 딜러은행의 유동성공급이 축소되는 한편, 소수 대형 딜러은행에 대한 시장조성 의존도는 심화*

* 2006년 50%였던 5대 채권 딜러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최근 65%까지 상승

- 예전에는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일지라도 해당 기업 CDS를 통해 위험/포지션 관리가 용이하였는데, Basel III 및 레버리지 규제 강화 이후 개별기업 CDS시장이 크게 위축

- 금융규제로 인한 딜러은행의 자본비용 상승과 자산축소는 RP 등 단기 자금시장과 나아가 파생상품시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 레버리지 비율 및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 복잡해진 거래 후 보고 의무, 손실 인식(haircut) 규제, 담보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RP시장 유동성이 크게 악화
- 이는 담보 변환, 파생상품·채권 시장 유동성, 통화정책 전달체계 등을 교란할 수 있는바, 실제로 최근 미국·영국 등에서는 RP(담보) 자금조달이 무담보 자금조달에 비해 금리가 높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궁극적으로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규제 강화로 인해 딜러은행이 시장에서 축출될 경우 그림자금융 부문에서 시장조성 역할을 일부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양적완화) 양적완화로 인해 채권가격이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에 비해 높아지면서 시장의 위험평가 기능이 상실되어 시장 변동성과 일방적인 움직임이 심화
- 그 결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장유동성이 양호한 것 같아 보이지만 딜러은행의 위축, 시장참여자의 다양성 감소, 양적완화로 인한 채권 고평가 등으로 인해 회사채시장이 경색시 회사채를 매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시장 여건이 악화될 때 회사채 매도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의 부정적 이슈가 부각될 때 선제적으로 보유 채권을 매도하려 하면서 시장변동성이 확대
- (전자거래 증가) 채권시장에서 전자거래 및 자동화거래*가 활성화되는 양상
- * 자동화거래는 전자거래 뿐 아니라 자료의 DB화, 참여자 네트워크의 구축 등 포괄
- 채권시장에서의 전자거래와 자동화거래 활성화는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고 시장 참여자간 연계성을 높여 거래비용 감소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
- 하지만 초단기매매(high frequency trading)과 관련하여 전자·자동화 거래의 활성화는 시장변동성을 확대하고 유사시 유동성 경색을 악화시킬 가능성

- 또한 전자·자동화 거래는 동질적이고 표준화되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 거래에 적합하지만 회사채의 경우 성격상 전자·자동화 거래에 어려움이 수반

다. 정책적 시사점

- 시장에서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회사채시장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히 의도한 결과
- 금융규제의 큰 목표 중 하나가 지나치게 위험한 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제한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회사채시장에서의 딜러 은행의 시장조성 기능 위축은 자연스러운 현상
-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딜러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풍부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
- 양적완화, 마이너스 기준금리 등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의 파급효과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채권거래 전자화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료 표준화, (유럽의 경우) 역내 파산법 일원화, LEI(legal entity identifier) 등 식별코드 표준화 등이 필요

2. 금융시장 전망(The Financial Market Outlook)

가. 금융시장 현황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의 반전과 선진국의 L자형 회복이라는 두가지 난관(headwind)에 직면
- ①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반전)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 국가의 과잉투자에 의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형성되었으며, 글로벌 자원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 초래
- 과잉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하 뿐 아니라 슈퍼 사이클 분야(원자재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 관련 산업(조선·해운 등)에서의 과잉투자 등 부정적 영향 증가

*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운업의 경우 발틱 운임지수(BDI)가 금년에 사상 최저 수준 기록

-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과잉투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어려운 상황

② (선진국의 L자형 회복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선진국의 회복세 부진

-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로 부실자산(NPL) 처리 및 신규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 투자결정 왜곡, 부실 은행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경제회복 지연

* 특히 에너지·원자재 분야 투자가 많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은행의 부도 가능성(distance-to-default)이 크게 높아진, 반면 美 은행의 부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오스트리아 은행의 경우 금리 수준이 100bp 하락할 경우 이자 수익이 23bp 하락하였는데, 금리 수준(interest rate level)이 낮을수록 이자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영향

□ (신흥국)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로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 우려가 심화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투자수익률 저하, 美 금리인상 이후 신흥국 통화절하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익률 악화 우려 등에 기인

○ 특히, 중국의 경우 기업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고평가, 위안화 절하 압력 등의 문제로 포트폴리오 자금유출 압력이 크게 증대

- 中 정부는 위안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역외 외환시장 개입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을 제한하는 한편 유입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시행

*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 규제 강화, 개인 및 기업 송금제한, 수입대금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유출제한 조치 및 적격 해외투자 기관에 대한 채권투자쿼터 폐지 등의 유입촉진 조치

- * 中 당국의 주식시장 부양, 일부 외환거래 제한 및 적극적인 외환유동성 관리, 경제구조 개혁노력, 위안화 약세 기대 약화 등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및 외환보유고 축소 문제 안정화
- 이와 같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당국의 비대칭적 태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환보유고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초래
- 다만, '16년 들어 당초 우려보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dovish”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흥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자금유출은 소폭 진정되는 모습
- (선진국) 선진국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중한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
-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금융시장의 수익성 개선 보다 변동성만 커질 우려

다. 향후 전망

-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
-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종료 지연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왜곡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가시화 될 경우 자본유출 재발
- 선진 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미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변동성 추가 확대 가능
- 또한 저성장 지속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익스포저는 자본 확충이 충분하지 않은 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한편, 구조조정 과정이 지연될 경우 자산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

3. 핀테크와 금융혁신(2017~18년 논의할 과제)

가. 연구배경

- 금융서비스 관련 기술혁신으로 인해 금융 산업 및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
- 핀테크로 인한 변화 속도와 범위는 금융정책 및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핀테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과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할 필요

나. 연구내용(계획)

- (핀테크와 금융중개) 핀테크로 예금, 대출, 지급 등 핵심 금융 중개서비스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핀테크가 은행 비즈니스 모델, 금융 중개,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핀테크와 중소기업 금융) P2P 대출과 신용점수제(credit scoring) 부문의 혁신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갭을 크게 해소해 줄 가능성이 있으나, 미약한 규제에 인하여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위험도 존재
- (금융거래 전자화) 기술발전으로 채권, RP 거래에서도 전자화가 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거래 전자화에 따른 시장유동성 이슈 검토

4. 친환경 에너지 투자 및 금융(2017~18년 논의할 과제)

가. 논의배경

- 기후·환경문제의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의 역할이 부각
- 그간 대체/재생 에너지(renewable) 분야의 비용경쟁력이 크게 제고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투자에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금융/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
- 12~13년 중 주춤했던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후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

□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그동안은 에너지 회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주식/회사채를 통해 자본이 조달되어 왔으나,

- 최근에는 기관투자자, 非에너지기업, PEF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

○ 기관투자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물가에 연동 (inflation-linked)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인식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

- 은행, PEF 등이 초기 개발 및 시설투자를 주도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이후 운영단계(operating-stage)에서의 필요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최근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Yieldcos*라는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는 등 혁신적 금융구조도 탄생

* 운영자산을 소유하여 장기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 수익을 배당해 주는 형태 기업

□ 그간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왔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

○ 일관되고 강력한 기후 협약 관련 목표의 설정과 이행 및 일관된 규제 여건 및 무역·투자 정책 유지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각국의 무역보호조치 해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시장 통합

II. 평가 및 시사점

□ 규제 강화, 전자거래 발달 등으로 회사채시장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채권 표준화, 전자거래 플랫폼 정비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규모가 작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 회사채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 유통시장의 딜러 의존도가 이미 낮고 거래가 대개 단순 중개(brokerage)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인한 유동성 악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각국은 회사채 유통시장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액채권 거래 플랫폼 정비, 전자거래에 적합한 채권 표준화 등을 검토 중
- 우리나라도 소액채권 장내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회사채, 특히 하위등급 채권의 유동성 제고 필요
- 회원국들은 핀테크에 따른 금융중개 서비스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핀테크로 인해 예금, 대출, 지급결제 등 핵심 금융중개 서비스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각국의 금융 규제가 핀테크로 인한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인가, P2P 대출제도 정비, 기술신용평가 대출제도 도입 등 핀테크 도입 초기에 있으므로 향후 논의시 우리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필요

3-2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워크숍 결과

1. 개회식 연사 발언 요지

1. Douglas Frantz OECD 사무차장

-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CSD)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세부목표로 포함됨에 따라 얼마 전까지 OECD 주도로 추진돼 왔던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 유엔 어젠다로 부상했고, 지금 우리 앞에는 그 동안 우리가 주창해 왔던 정책정합성을 SDG 이행에 실제 적용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
- 17개 SDG 목표 이행 과정에서 SDG간에 상쇄(trade-off)나 파급(spill-over) 효과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SDG 달성을 위한 정책이나 수단 수립 시 그 어느 때보다

스마트한 선택이 필요함.

2. Kitty van der Heijden World Resources Institute Europe 소장

- SDG는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유사하지만 다른데, △포용성 및 보편성 추구 △불평등 해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지속가능성 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MDG와 차이가 있음.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CSD)이 세부목표로 포함된 것도 MDG와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PCSD 이행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3. Annika Markovic OECD 주재 스웨덴 대사

- 스웨덴 정부는 SDG 이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SDG 이행 지원 및 독려를 위해 독일, 남아공, 브라질 등 9개국과 고위급지원그룹(High-Level Support Group)을 결성하였고, 국내적으로 SDG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3명의 각료(전략개발장관, 국제개발협력장관, 공공행정장관)에게 SDG 이행 관련하여 특별 임무 부여
- SDG 이행에 있어 도전과제로는 17개 목표 별로 선도 부처(lead ministry)와 2선 지원 부처들(second-tier ministries)을 선정하고,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영향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II. 세션 1(글로벌 목표에서 국별 이행으로-초기 이행 경험에서 얻은 교훈) 패널리스트 발표 요지

- 독일은 2002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전략’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2030 어젠다가 새롭게 채택된 점을 고려, 기존 전략을 업데이트하기 보다는 금년 중에 새로운 어젠다에 맞춰 동 전략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현재 새로운 지속가능개발전략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은 독일이 17개 SDG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실행코자 하는 행동

들을 상세하게 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PCSD 관련하여 각료들 간 불간섭(non-interference)을 규정한 연방 헌법으로 인해 범정부적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부처들이 PCSD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총리실에서도 범정부적인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속가능개발전략에 PCSD 이행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게 될 것으로 봄.
- 한국(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SDG 이행 초기단계로서 현재 2030 어젠다가 가져올 변화가 무엇이고 동 어젠다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기존 국가 정책이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 금년 1월 채택된 ‘제3차 지속가능개발 기본계획(2016-2035)’ (third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수립 과정에서 2030 어젠다와 SDG가 적극 고려되긴 했으나 SDG를 국가정책에 주류화시키지는 못했으며, 앞으로 구축될 SDG 이행체제에 따라 동 기본계획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됨.
- SDG 이행과 관련된 도전과제로는 개별국가가 지속가능개발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SDG 목표와 세부목표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와 SDG 목표들 간 시너지와 상쇄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불확실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스웨덴 정부는 2002년 ‘국가 지속가능개발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여 모든 정책 수립 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을 고려하도록 조치했고, 스웨덴 의회는 2003년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CD)이 포함된 ‘글로벌 개발정책’ (PGD: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해 기존 PGD와 시행계획을 개정하는 작업을 범국가적으로 벌이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전략, 개발협력, 공공행정 담당 3개 부처를 SDG 이행방안 마련 선도 부처로 지정하고, 전략개발장관에게 범분야적(cross-sectoral)이고 장기적(long-term)인 시각 반영, 국제개발협력장관에게 국제적 시각 반영, 공공행정장관에게는 국내 시각 반영 및 조정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음.
- 또한 2030 어젠다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문화계, 지자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대표단’ (National Delegation) 을 구성하였음. 동 대표단은 2030 어젠다의 이행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SDG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 정부 부처,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2030 어젠다와 SDG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SDG 논의 과정에는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나 이행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의 SDG 목표들이 네덜란드의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이미 반영돼 있고 난민위기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돼 있으며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됨.

111. 세션 2(PCSD-범분야 이행 수단) 패널리스트 발표 요지

1. EU의 PCSD 이행방안 마련

- 유럽연합(EU)은 19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CD)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PCD의 개념 정립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고, 2005년에는 ‘개발에 관한 컨센서스’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를 통해 PCD를 EU 개발협력의 중심축으로 부각시켰으며, 2007년부터는 2년 마다 PCD 보고서(EU PCD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음.

- PCD에서 PCSD로의 전환 관련하여, PCD가 이미 EU 정책과 집행기관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CD에서 PCSD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EU내에서 2030 어젠다 이행을 어디서 총괄 조정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PCSD를 누가 담당하게 될지도 불확실한 실정임.

2. PCSD의 경계 확장

- PCD는 개별국가의 정책정합성 어젠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SDG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과학계 등 초국가 행위자의 정책이나 행동도 중요한 바, PCSD나 2030 어젠다, 그리고 SDG의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할 때 초국가 행위자를 고려하는 방법들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

- 개별국가 정책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초국가 행위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PCD에서 PCSD로의 전환

- 기존 PCD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SDG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새로운 어젠다의 비전과 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 개발부처 및 원조기관을 넘어 전 정부적인 참여 확보 △정책 간 긴장과 시너지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 구축 △정책의 사전, 현재 및 사후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민사회, 민간부문을 포함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동참 유도 △모니터링 및 보고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별국가의 역량 동원 등이 필요함.
- OECD는 SDG 이행을 위해 △SDG와 개별국가의 정책 간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와 다른 국제 어젠다들 간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들 간 △다양한 재원들 (sources of finance) 간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 다중 행위자들(multiple actors)의 행동 간 정합성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IV. 세션 3 : SDG 이행과정에서 정책 간 상호작용의 규명 및 측정

1. 워크숍 첫날 논의 결과 브리핑

- World Resources Institute(WRI)는 SDG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담론과 정책 정합성(policy coherence)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첫날 토의 결과로 요약함.
- (New growth narrative를 이루는 요소) 자연자원의 가치 인식,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한 성장 견인, 불평등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도전과제로 인식, 낙오자들의 변화를 이끄는 효과적 지원 등
-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의 보편성(universality)과 통합성(integration)은 정책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요구하며, PCSD는 새로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수단
- (실행 전략) PCSD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최고위 리더십 주도의 접근 필요,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SDG 이행방안 마련 필요, 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확보

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활용 등

* SDG는 새로운 이윤 창출 기회이자 올바른 경영방침 가이드

- 참가자들은 PCD가 PCSD로 진화하면서 현장 적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금번 워크숍 논의가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시함.
- PCD는 공여국 국내 정책이 개도국 개발에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명료하였으나, PCSD는 이에 더해 공여국 국내 정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여 논의의 복잡성 가중
- 정책 부처 간 지향이 상이하어 적대적 대치상황이 빈번한데, PCSD는 올바른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현실적 해결방안 제시는 부족

2. PCSD 분석 수단 소개

-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물-에너지-식량 주제별 다양한 정책의 연관성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내는 nexus approach를 개발 중임.
- * 각 정책 간 관계를 dependent(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 impose condition(한 정책이 다른 정책효과를 제한), reinforce(정책 간 시너지 창출 가능)로 구분
- 또한, 스웨덴 국내 정책에 대한 시범 학습 결과, 정책 목표가 세 가지 측면(국내 정책 의제, 개도국 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에 걸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각국이 SDG 이행 시작선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Global dash board*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PCSD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길 기대함.
- * UN SDG Monitoring 체계의 일부는 아니며, 통계가 아직 부족하여 단순화된 정보만 제공하는 상황
- (Millennium Institute) 다수 투자계획을 입력하며, 상호 충돌이나 시너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OECD) NAEC(New Approach to Economic Challenges)을 통해 생산성, 성장, 환경, 불평등, 웰빙 등 주제 간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Better Life Index와 SDG Indicator간 mapping을 시도 중임.

V. 세션 4 : PCSD 파트너십 논의

- 국제기구, 싱크탱크, 학계를 포괄하는 PCSD 파트너십이 각국의 SDG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논의(실행 방안, 소통 전략 등)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현황 공감) PCSD는 PCD보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한편, 각 부처에 국제협력팀이 존재하나 정책 의제 핵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력이나 권한(mandate)이 부족한 상황
- (향후 노력)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담론 제시, 국제사회의 SDG 이행 합의를 PCSD 추동력으로 활용, 국내적 이행 전략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 논의 등

VI. 오찬 세미나 : SDG 이행수단으로서 PCSD

1. 패널리스트 발표 요지

- World Resources Institute(WRI)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식량 문제 심화 가능성, 장단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경제·사회 문제(global risk)에 대한 서베이 결과* 등을 소개하며, SDG는 글로벌 정치·경제 도전과제이며 모두의 변화(global transformation)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향후 18개월 : 대규모 난민 문제, 향후 10년 : 물 문제

- 핀란드는 1993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전략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 비전하에 8개 통합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230개 실행 공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함.

- 총리실을 허브로 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개발협력위원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분야별 네트워크 등을 운영 중

- SDG 시대를 맞아 PCD* 개념은 PCSD로 진화하였으며, OECD는 2007년부터 PCD팀을

DAC 산하에서 사무차장 산하로 이전시키고, 조직 전반의 활동과 분야별 정책위원회 간 통합적 논의에 기여코자 노력 중임.

- *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효과성 논의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개도국 개발을 위해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산업통상 정책 간 조화 추구
- 녹색성장, 불법자금흐름 등 특정주제에 대한 정책통합성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
- PCSD의 목표는 경제·사회·환경 정책 간 시너지 창출, 대내외 정책 간 상충관계 파악 및 국내 정책 간 파급효과(spill-over)를 다루는 것임.

2. 참가자 발언 요지

- (일본 대사) 정책정합성 확보를 위한 중앙 집중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정책 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PCSD가 임의적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 * 2014년 OECD 수출신용작업반(ECG) 회의에서 합의한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 제한 조치를 예로 설명
- 이에 대해 사무국과 WRI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항상 필요하며 PCSD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환경 외부성(externality)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선택의 필요성을 언급
- (캐나다 대사) 국제기구는 집단적 행동이 개별적 행동보다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4 라트비아 경제동향 보고서 발표

□ 정보출처 :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

4 라트비아 경제동향 보고서 발표

□ 라트비아 경제부는 라트비아의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

1. 경제성장(GDP)

- 2011-2013년 기간중 라트비아 경제는 연평균 4.4%의 GDP 성장률을 시현함.
- 2014년에는 EU 회원국의 성장세 둔화와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라트비아 경제성장도 둔화되어 2.4% GDP성장에 그침.
- 그러나 2015년 들어 역내 지정학적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을 시현하였는바, 2/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증대되어, 2.7%의 GDP성장을 달성함.
 - 라트비아는 EU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
- 2016년도 라트비아의 GDP성장률은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내수

- 2015년에 국내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된바, 평균임금의 비교적 빠른 상승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개인소비증가(3.3%)를 촉진하였음.
- 2015년도 투자지출은 2.6% 증가되었으며, 정부예산지출의 증대에 따라 공공부문 소비는 3.1% 증가됨.

3. 교역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 라트비아는 경제회복세에 진입하여 2009-2012년 기간 중 교역이 급속히 증대됨.

- 수출은 연평균 25%, 수입은 연평균 23% 각각 증가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해외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초래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러시아 수출이 현저히 감소(24.4%)되었으나, CIS를 제외한 여타국에 대한 수출증가(22.4%)에 힘입어 총 수출은 소폭(약 1%)증대됨.
- 2011년 이래 경상수지는 매년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2013-2015) 기간중 연평균 경상수지적자는 GDP대비 1.9%를 기록함.

4. 부문별 동향

(제조업)

- 2015년 금속가공 및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제조업부문은 4.3% 성장함.

(서비스)

- 무역관련 서비스 부문은 3.2%의 지속적 성장을 시현하였고, 숙박업, 요식업 부문은 6%, IT 부문은 3.3% 각각 성장한 반면, 교통·건설부문은 2014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올림.

5. 고용

- 최근 라트비아 경제상황 개선에 따라 고용인구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 2015년에는 전년대비 고용인구수가 1.3% 증가되었으며, 실업률은 9.9%로 감소되었음.

6. 물가

- 세계유류 및 식량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아, 2015년 물가상승률은 0.2%를 기록함.

5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 동향

□ 정보출처 :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 동향

□ 정보출처 :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표 및 주요언론보도 종합

1. 2016. 1/4분기 외국자본 참여 기업 109개 설립(uzdaily, 4.21)

- 통계위는 2016.1분기 우즈베키스탄내 109개의 외국자본 참여 기업이 등록하였으며, 이중 최대 기업수는 타슈켄트시 78개, 타슈켄트주 9, 사마르칸트 4개 등임.
- 국가별로는 △러시아 21, △중국 20, △한국 10, △카자흐 9, △영국 8, △터키 7, △인도 5개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 51, △도매 19, △요식업 7, △건설 6, △농업 3개 등

2. 우즈베키스탄내 사업자 등록 절차 30분내로 절감(uzdaily, 4.23)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동 절차가 이행되는 경우 등록이 30분내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 동 제도 이행시 등록기관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사업자의 간접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환경이 개선되며, 향후 국제 기업환경 평가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3. 노후화된 설비 수입시 형사 처벌 추진(podrobno, 4.27)

-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법령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16.4.26(화) 노후 설비 수입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형법이 개정됨.
- 해당 법규에 따르면 주재국의 산업 현대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관련 수입되는 설비의 생산일이 주재국내 반입일 기준 3년 이내여야 하며, 동 규정의 위반 시 △초범의 경우 과태료(최저임금의 300~500배, ≙1.3만불~2.2만불) 또는 3~5년 징역, △재범의 경우 5~8년 징역,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12

년형 등 가중처벌

- 다만 물질적 손해를 3배 이상 보상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면제
- 한편 정부는 내각산하 신규 건축/재건 생산시설/설비확충 사업의 기술경제타당성 조사 전문평가원을 설립하여, 노후 설비 국내 반입 요건 강화를 추진중임.(대통령 결의 PP-2413, 2015.9.30.)
- 이에 따라 설립되는 기술경제타당성조사 전문평가원은, 생산 시설의 신규 건축/재건 사업 관련 첨단 설비 구축을 위해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의 전문 평가 및 설비 가격의 엄격한 평가 이행

4. 독일 Knauf사, 신규 건축자재 생산 공장 건설 추진(podrobno, 4.27)

- 독일 Knauf사는 향후 5년간 부하라지역에서 기존의 석고보드 생산라인 확대 및 신규 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1단계: 기존 석고보드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구매, △2단계: 석회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 공장 건축, △2단계: 기존 석고보드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구매, △3단계: 석회 소성 시설 구축을 추진하며, 향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5년도 독일 Knauf사는 △석고보드 24백만 m^2 , △석회 5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상당량이 내수시장에 공급됨.
- 해당 업체는 월 4만톤의 석회석을 채굴하고 이중 2.5만톤을 시멘트 회사 등에 판매 중